사회복지 주간 동향(23.7.11.~7.14.)

1. 용인시 정책 동향

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신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40가구에 선풍기 등 여름물품 지원



- * 용인특례시 기흥구 신갈동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성근)가 4일 관내 주거 취약가구 40세대에 선풍기, 여름침구세트, 제습제 등 여름용품을 지원했다고 5일 밝힘
 - 협의체는 그동안 신갈동에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을 활용해 지원 물품을 마련함
 - 신갈동은 반지하, 고시원, 다가구, 원룸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가 많아 여름용품이 절실함
 - · 이성근 신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반지하 등은 습도가 높고 해가 잘 들지 않아 장마와 무더위에 특히 취약하다"며 "여름용품을 받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쾌적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신갈동 맞춤형복지팀)

영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안부식품 배달사업 협약



- * 용인특례시 기흥구 영덕2동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6일 한국야쿠르트 영통점과 '딩동딩동! 안녕하세요?'라고 이름 붙인 취약계층 안부 식품 배달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힘
- 이번 사업은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저소득 노인 부부 등 총 8가구에 11월 까지 야쿠르트 배달 매니저가 주 2회 유산균 음료와 국 또는 반찬을 번갈아 배달하면서 안부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 · 오현숙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새로운 복지사업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영덕2동 맞춤형복지팀)

용인특례시, 초복날 힘내세요! 어려운 이웃에 '보양식 사랑'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 봉사단체들, 곳곳서 삼계탕 등 전달 >



※ 상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



※ 보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



※ 풍덕천l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

- * 용인특례시는 초복(7월11일)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에 보양식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9일 밝힘
- 지난 6일 처인구 중앙동 봉사단체 사랑회(회장 김현우)는 저소득가정 50 가구에 150만원 상당의 복달임 음식을 전했다. 홀로 어르신들에게는 삼계탕을 개별 포장해 전하고 아이를 둔 가정에는 모바일 치킨 쿠폰을 전달
- 기흥구 상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노석환)는 관내 저소득 홀로 어르신 30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삼계탕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
- 보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명옥)도 이날 취약계층 어르신 25가구에 삼계탕, 두유, 귤, 견과류 등을 담은 보양 꾸러미를 전하고 다른 불편은 없는지 살핌
- 수지구 풍덕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말선)는 관내 음식점 만세삼계탕(강서호)의 후원을 받아 저소득 홀로 어르신 등 취약 계층 40가구에 삼계탕 전달, 만세삼계탕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복날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을 후원해옴
- 앞선 5일에는 양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소영)가 저소득 취약 계층 30가구에 무더위를 식혀줄 나무 돗자리와 삼계탕을 전달
- 남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임경선)는 지난 4일 취약계층 40 가구에 갈비탕, 삼계탕, 과일 등이 들어있는 보양식품 꾸러미를 지원
- 백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신명철)도 같은 날 저소득 취약계층 20가구에 삼계탕과 식료품을 전달
- 이날 수지구 상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안대순)는 수지함께하는 교회(담임목사 박종혁)와 업무협약을 맺고 홀로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70가구에 삼계탕을 지원
 - · 이번 협약에 따라 수지함께하는교회는 7월부터 매월 2회 취약계층 20 가구에 밑반찬을 지원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남사읍, 백암면, 양지면, 상하동, 보라동, 풍덕천1동, 상현3동 맞춤형복지팀)

동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에 여름 물품 지원



- *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1동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구본선)가 7일 관내 취약계층 10가구에 10만원 상당의 맞춤형 여름 물품을 지원하는 '시원바람, 행복바람, 여름나기' 지역특화사업을 진행했다고 9일 밝힘
- 협의체는 취약계층 10가구를 선정해 선풍기, 여름이불 등 맞춤형 여름물품을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확인
 - · 구본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고령, 장애, 만성질환 등이 있는 경우 여름철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 취약계층이 무더위를 이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름 물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함
 - · 동백1동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대상자의 선호에 맞는 맞춤형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소외된 이웃을 살펴 더불어 살아가는 동백1동을 만들겠다"고 밝힘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동백1동 맞춤형복지팀)

성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베이커리 카페 '타임투비' 복지협력기관 인증



- *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희숙·민간 위원장 이명희)가 베이커리 카페 '타임투비'를 지역복지협력기관으로 정하고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힘
- 협의체는 일 년에 5만원 이상 정기 후원하거나 100만원 이상 기부한 단체를 지역복지협력기관으로 지정, 나눔문화에 동참해 준 데 대한 감사와 격려의 의미로 현판을 전달하고 있음
- 타임투비는 지난 4월 협의체와 '사랑Dream 빵드림' 협약을 맺고 매월 저소득 가정 10가구에 제과 제빵류를 나눠옴
 - · 동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타임투비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며 "두 단체가 보여준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성복동 맞춤형복지팀)

양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주거지 폐기물 처리



-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은 2일부터 5일까지 관내 거주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집에서 폐기물을 처리 진행하였다고 밝힘
 - 대상자는 10년 넘게 주거지에 폐가전제품, 대리석 판, 못 박힌 목재 등을 과도하게 쌓아 집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며 쌓아놓은 폐기물에 이웃들이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
 - 양지면행정복지센터는 위생 및 건강 문제와 화재 위험 등을 고려해 조치에 나섬
 - 대상자도 폐기물 처리에 동의하면서 양지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 지도자·부녀회, 양지면축구협회, 용인시청자원봉사동호회 등 봉사자를 모집 해서 주민들과 함께 대상자 주거지의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고 청소를 실시
 - 나흘 동안 많은 양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청소하기 위해 각종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외에도 행정복지센터 및 파출소 직원 등 총 70명이 동원
 - · 폐기물 처리 활동에 나선 봉사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대상자의 위생 및 건강이 증진되고 오랫동안 이웃이 겪어왔던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함
 - · 양지면 관계자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주민과 관련 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힘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양지면 맞춤형복지팀)

양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름용품 및 보양식 지원사업 추진



-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은 5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소영)가 저소득 취약계층 30가구에 여름용품 및 보양식을 전달했다고 밝힘
-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4명은 대상 가정을 방문해 직접 여름용품 및 보양식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핌
- 폭염에 취약한 홀로어르신 및 저소득 취약계층 30가구에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대나무돗자리를 지원했으며, 무더위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배달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직접 여름보양식 삼계탕을 만들어 전달
 - · 이소영 위원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하며, 복지 사각지대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양지면 맞춤형복지팀)

2. 증앙정부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복지현안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청·중장년 일상돌봄 제공

<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 대상 돌봄, 동행 및 심리지원 등 통합 제공 >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청·중장년 일상돌봄 제공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 대상 돌봄, 동행 및 심리지원 등 통합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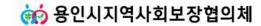




- *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
 - 일상돌봄 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소위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및 아이돌봄 등 기존 돌봄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장년과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웠음, 특히 질병, 부상, 고립 등을 경험하고 있는 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일상에서 돌봄, 심리지원 및 교류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연령 또는 소득수준 등 복잡한 서비스 제공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
 - 돌봄 필요 중장년의 서비스 수요(중장년 대상 심층 인터뷰
 - · "경제적인 게 아니더라도 전화 한 통 해 줄 수 있고 안부 확인해 줄 수 있는, 아팠을 때 병원이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도 있었으면"
 - · "혼자 있으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껴서 그것이 좀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게 많이 오는 것 같고..."
 - 가족돌봄청년의 서비스 수요(가족돌봄청년 대상 심층 인터뷰)
 - · "제가 하루에 6시간만이라도 일을 하거나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고, 그 시간 동안 누군가가 엄마를 돌봐줄 수 있다면 디딤돌이 될 것 같거든요."
 - · "엄마 돌보고 나서 처음으로 정신과 약을 먹어봤었어요. 그때 좀 힘들어서."

- "돌봄 교육, 저는 그거 필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인식 자체가 조금이라도 교육이 있어야 대처를 하지..."
- * 이번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촘촘한 돌봄 제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시작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정부의 사회보장 전략인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 특히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돌봄 지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의 서비스 복지 철학을 구현한 것
 -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❷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
 - · ①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에서 12시간을 제공할 예정, 최대 72시간의 경우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지원
 - · ②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서비스가 달리 제공,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따라,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 부과,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이용권(바우처) 발급 가능, 대상자는 이용권을 사용해 지역 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 가능
 - 서비스 제공기관은 민간기관 중 우수한 기관들이 다수 참여하도록 하고, 주기적 컨설팅 및 인력 교육 등을 통한 지원으로 경쟁과 창의에 기반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여건을 조성할 계획
 - 정부는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 공모 ('23.5.16.~6.13.)를 통해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를 사업 수행지역으로 1차 선정
 - · 선정된 지역은 7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 또한 사업 추진과 함께 조속한 사업지역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이어 2차 사업지역을 추가 모집할 계획
 - · 각 지역은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2 중앙정부 복지현안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개통

< 수기 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 < 복지사업 설계 시 타 기관의 사업 참고하여 신규 사회보장제도의 품질 향상 기대 >
- * 보건복지부는 7월 3일(월)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을 개통함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유지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목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
 -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전 과정을 전산화 하여 신설·변경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의 이력을 관리 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 해당 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 공문 중심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이 전산화되어 각 부처와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담당자들의 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 또한, 매년 약 천 건의 타 기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표준화 기본정보 (사업목적, 가구유형, 생애주기 등)와 목록 등을 검색·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중앙·지자체 담당자가 복지사업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

붙임 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개요

- (목적)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유지 및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
- (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 의무화('13년 이후)
- (사전협의 대상) '사회보장' 및 '평생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제도 신설·변경
- · (사회보장)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
- ·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5호)
- (협의기준) 신설·변경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재정· 지역복지 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 특히, 지자체는 자치분권 취지와 국가 사회보장체계 정합성을 고려

- (업무절차) 중앙·지자체 협의 요청 시, 전문가·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종합 검토를 거쳐 결과 통보('협의완료' 또는 '재협의' 등)

협의요청 (중앙 전년 4.30일까지/ 지자체 전년 6.30일까지)

의견수렴 및 안건검토 (기본 60일, 쟁점사항 6개월)

결과통보

[중앙·지자체→ 복지부] 협의요청서 제출

[보건복지부↔전문가/관련기관 등]

- ①전문가 사전검토 (보사연_협의지원단)
- ②관련부서(부처) 의견수렴
- ③제도조정전문위원회

[복지부→ 요청기관] 협의완료 또는 재협의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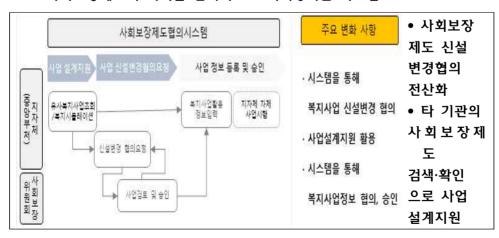
- ※ 협의 미성립시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조정안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연도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건수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6월*
합계	58	75	290	878	1,078	1,028	1,121	933	1,049	850	1,039
중앙부처	30	12	13	29	38	46	55	48	33	32	29
지자체	28	63	277	849	1,040	982	1,066	885	1,016	818	1,010

붙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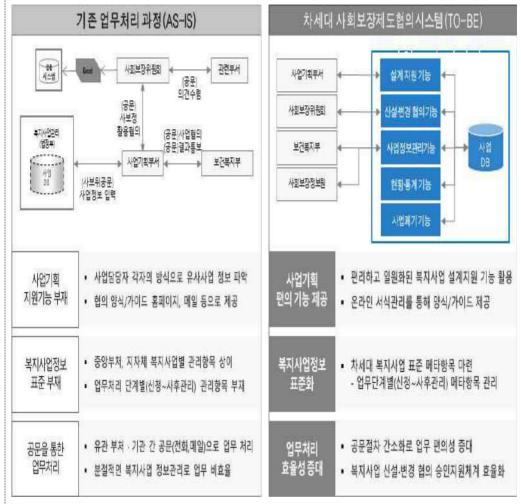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개요

- (개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신설·변경된 사회보장제도의 이력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사업설계지원) 타 기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표준화 기본정보(사업목적, 가구유형, 생애주기 등), 목록 등을 검색·확인 가능
 - · 계획 중인 사업의 복지대상자를 추출하여 대략적인 지원규모 및 예산규모를 추정 가능

- (전산화) 공문중심의 수기업무를 전산화하여 효율적 관리(공문은 자동생성 되어 전자결재 처리)



→ 사전단계 강화(유사사업 검색 및 설계지원)으로 사업기획 품질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가시성(可視性)개선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3 중앙정부 복지현안

아동보호체계 개편부터 미혼모 지원대책까지 범부처 정책과제 발굴

- <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 출범(7.5) >
- < 행안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민간 자문단 구성 >
- * 보건복지부는 7월 5일(수)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
 -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 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
 -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 논의,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복지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행안부),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여가부)
 - ▲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함께,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
 -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부처 간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
 - ·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 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함
 - 마지막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대안으로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위기 임산부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과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이와 함께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 에서 아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함

붙임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l차 회의 개요

- * 회의 개요
 - (목적)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주요과제 추진현황 점검 및 추가과제 발굴
 - (일시/장소) '23.7.5.(수) 13:30~15:00/서울스퀘어 11층 회의실
 - (참석) 보건복지부 제1차관(주재)
 - (정부) 교육부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법무부 구승모 법무심의관, 행정안전부 구본근 지역기반정책관, 여성가족부 김숙자 가족정책관, 경찰청 김준철 생활안전국장, 보건복지부 이선영 인구정책총괄과장(인구아동정책관 직대)
 - (민간) 정익중 원장(아동권리보장원), 배건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민애 관장(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최안나 센터장(국립중앙의료원 난임·우울증 센터), 배성희 회장(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 * 안건
 -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복지부)
 - ②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 (복지부)
 - ❸ 출생미등록 아동 집중조사 및 지원 방안 (행안부)
 - 4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 (여가부)

< 회의 주요일정 >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13:30~13:35	5′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인사말씀	복지부 차관	
13:35~14:15	40′	■ 안건 보고	복지부 관계 부처	
14:15~14:55	40'	■ 추진방향 등 논의	-	
14:55~15:00	5'	■ 내용정리 및 마무리 말씀	복지부 차관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4 중앙정부 복지현안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 제2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개최(7.7) > <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

-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7월 7일 금요일 15시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서비스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2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됨
 -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은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공론의 장으로,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림
 - ·제1차(5.4.):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제고 방안
 - · 2023년 총 5회 개최 예정(제3차 8월, 제4차 9월, 제5차 11월)
 - 먼저 1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의 진행으로 강남대학교 한동우 교수가 '사회공헌 현황과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민, 관의 역할'을 주제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확대되어 온 기업사회공헌 현황을 짚어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 기업-정부-민간의 사회공헌 정보 소통 플랫폼 구축, 기업 사회공헌 인증과 인센티브 부여 및 규제 개선 등을 제안
 -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경희 사회공헌본부장,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우용호 사회공헌센터소장, 대한상공회의소 김현민 공급자ESG지원 센터장,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가 참여하여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회서비스와 기업 사회공헌을 연결하기 위한 민간의 역할에 대해 논의
 - 2부에서는 '기업에게 듣는 사회서비스'라는 주제로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과 임팩트스퀘어 도현명 대표의 공동 진행을 통해 국내·외 기업 사회공헌 사례발표와 토론을 진행
 - · 국내·외 기업 사회공헌 사례는 비랩코리아 서진석 이사, 현대차 정몽구 재단 최재호 사무총장,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황애경 이사가 참여하여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과 협력을 통한 사회가치 창출 사례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과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강남 대학교 한동우 교수가 1부 발제에 이어 2부 토론자로 참여하여 논의를 이어감 ※ 보도자료 참조(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과)

3. 통계로 보는 복지

